5·31지방선거 D-23

내분 치닫는 우리당 광주시장후보 경선

불공정 논란속 前歷 비방전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둔 열린우리당의 내분 양상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분란의 원인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조영택 예비후보 지지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과 최근 불거진 조 예비후보에 대한 김 예비후보측의 전력 시비로 요약된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조 예비후보 지지를 둘러싼 김 예비후보와 조 예비후보간, 김 예비후보와 국회의원들간 논란은 지난 4월 초 조 예비후보가 광주시장 출마를 결심하면서부터 표면화됐었다. 이후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100% 시민여론조사'로 결론이 날 때도 의원들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다시피 했었다.

그러나 우리당 중앙당과 지역의원들은 조 예비후보만이 박광태 민주당 후보와의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7일 오후 열린 우리당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들의 조영택 예비후보 지지 기자회견장에 김재균 예비후보(광주시당위원장)이 나타나자 정동채 의원이 김 위원장 손을 잡고 회견장 밖으로 나가며 참석을 만류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김후보측 "특정후보 몰아주기" 반발

이번주 예정 경선 치러질지 미지수

◇**상호 비방전**=국무조정실장 출신인 조영택 예비후보의 내무부 재직시 징계 전력이 경선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형진·황정현·범일규·강성호 등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7명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장 후보를 5월 13일까지 끌고 가는 등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전략공천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심판이 돼야 할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의 캠프에 참여하는 등 편파적 경선 참여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또 "시장 후보 중 한 분은 현직 시장 재직 시절 뇌물 수수로 보직해임됐고 부동산투기로 많은 돈을 벌었다"며 "비리공무원 출신이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다면 광주시민이 뽑아줄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의 전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영택 예비후보 측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악의적인 명예훼손이 계속될 경우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임택 광주시당 부위원장 등 60여명의 당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민과 당원 의사를 호도하면서 해당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일부 특별위원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무엇이 광주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인지 당원들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택 금품 관련 사건은**=감사원은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93년 5월 인사·예산과 관련 특혜를 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년여 동안 1억7천670만원을 받은 내무부 간부 10명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문제는 이들중 1명이 당시 의정부시장이던 조 예비후보였다는 점이다. 조 예비후보와 관련 문제가 됐던 금액은 1천만원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관계에서는 인사치레 정도의 '관례'를 정권 초기 군기잡기를 하고 있다며 동정론이 우세했다. 조 예비후보는 사흘 뒤 직위해제됐으나 소청을 통해 감봉 1개월로 감경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조 예비후보 관련 계좌에 친인척들이 보내준 돈까지 포함되어 있어 '표적 사정'이란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은 조 예비후보의 발목을 잡아왔다. 지난해 4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될 때도 경실련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조 예비후보 측은 이 문제가 쟁점화되자 "당시 내무부 행정과장을 맡고 있다가 시·도지사들이 부서 방문 때 전달한 격려금을 모아 과비로 사용한 것으로 야근 부서 예산이 없는 데 따른 관례였기 때문에 뇌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당시 소청심사위도 이 상황을 반영, 경징계만 내렸으며 이후 정부로부터 기록에 대한 사면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례에 의한 행동을 큰 비리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불공정 경선 논란**=김재균 예비후보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데 뭉쳐 조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불공정 경선이라며 끊임없이 주장해 왔었다. 급기야 시장 예비후보가 불공정 경선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해당행위자'로 중앙당에 제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정동채·김태홍·염동연·양형일·지병문·김동철·강기정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은 7일 오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영택 예비후보가 속도감 있는 광주 발전과 성장을 위해 매우 적합한 인물임을 거듭 확신한다"며 "국회의원 일동은 광주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조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균 예비후보는 이들의 회견 직후 같은 자리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은 중앙당 선거관련직과 시당 선거직을 맡고 있어서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회의원의 이번 기자회견은 불공정 경선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며 때문에 이들을 중앙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차관 잇단 광주·전남 방문 관권선거 논란

민주당 "모든 방문계획 선거 이후로 미뤄라"

5·31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장·차관들이 잇따라 광주·전남을 방문키로 해 관권선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7일 참여정부 장·차관들의 호남지역 방문계획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관권선거 획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8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치범 환경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김우식 과기부장관 겸 부총리, 이재훈 산자부 차관보 등이 축제 참관이나 일일교사 체험, 특강, 관련 기관 순시 등을 이유로 잇따라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키로 한데 이어 한명숙 국무총리도 이달 하순께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기·행자·환경·노동부 장관, 산자부 차관이 8일과 10일 함평 나비축제 참관, 특강 등을 내세워 줄줄이 광주, 전남지역을 찾을 계획"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참패가 기정사실화되자 정부, 여당이 장·차관을 총동원해 내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8일 모교인 함평 대동초등학교 방문과 함평 나비축제 관람을 위해 함평을 방문한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이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하수처리장을 순시할 예정이며, 이재훈 산자부 차관보도 같은 날 광주 평동공단·광산업단지를 둘러본 뒤 용봉포럼 강의를 할 계획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0일 오후 광주지방노동청을 방문한 뒤, 11일 금요조찬 연수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김우식 과기부장관은 11일 광주과기원에서 특강을 한뒤, 삼성광주전자를 찾을 예정이다.

김 부대변인은 "집중적으로 장·차관이 방문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명숙 총리마저 광주, 전남을 방문한다면 국민들로 부터 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며 "정부, 여당은 각료들의 방문계획을 선거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우리당 조바심 한나라 몸조심

민주,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총력

5·31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수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다.

특히 정동영 체제의 열린우리당은 상당한 호응을 얻으리라고 기대했던 지방정부 심판론이 지방선거에서 별다른 분위기 전환을 이루지 못하자 내심 긴장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지방정부 심판론도 먹혀들지 않고 공천 비리 등 각종 악재도 한나라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 등 여권이 그동안 보여왔던 각종 사회적 논란이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부동층을 보수쪽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여권에 대한 반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고착화된 측면이 강해 대통령 탄핵과 같은 폭발적인 모멘텀이 없는 한 막판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일보와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서울시 유권자 가운데 강금실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고작 3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여권에 대한 구조적, 정서적 반감에 산토끼(타 정당 지지층)은 멀리 도망가고 집토끼(핵심 지지층)마저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에 열린우리당측은 너무 비관적인 전망이라며 지방선거 심판론과 한나라당의 악재가 계속되면서 부동층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지방선거 막판에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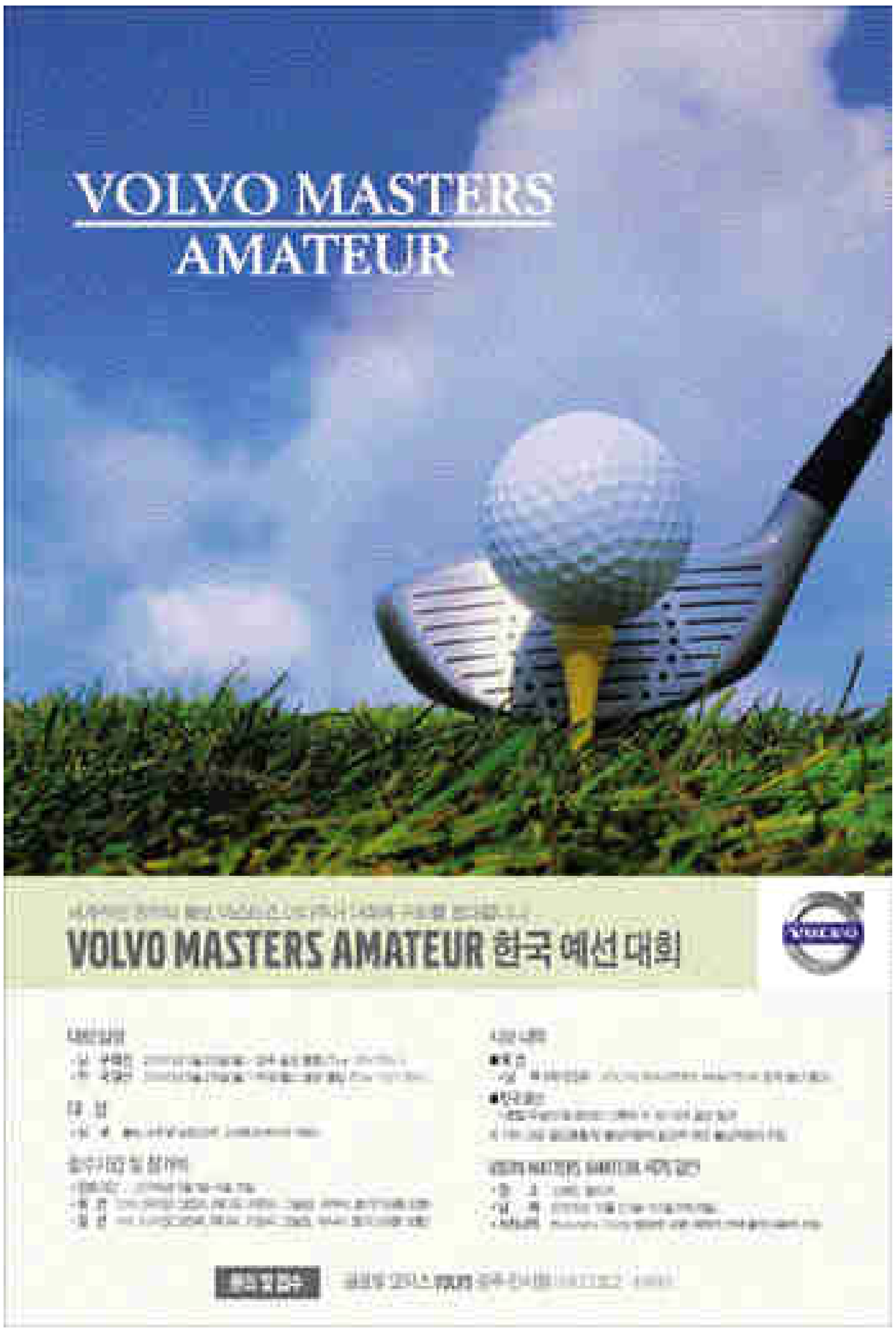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상승세가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으며 지방선거 막판 거대한 기류로 나타날 것"이라며 "광주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등 호남지역에서부터 민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들의 비리 혐의가 포착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부자 몸 조심'을 확실히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공세도 못 들은척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들이 이미 여당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만큼 괜히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 것 없다는 것이다.

초조한 열린우리당의 전방위 공세에 한나라당은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정책적으로 토론하자'며 보다 큰 틀에서의 반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대로 조용히만 간다면 지방선거는 필승'이라는 자심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거 초반인데도 부동층 비율이 20%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판세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자신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민주당**=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와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는 자신들의 선거보다는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광주에서의 정당 지지율 역전 현상을 놓고 광주시장 선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는 사실상 끝났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강현욱 지사를 영입, 광주, 전남, 전북 광역단체장 석권을 노렸지만 전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타 지역 선거에서 두 자리 수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 차기 정계개편 과정에서의 지분을 확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